

# 김상곤 “소년법, 처벌의 기준… 중요현안”

###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 논의… 법무부 중심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 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이를 법무부 중심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범죄가 잇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 상한선을 높여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1일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세종,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우선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범정부 종합대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책에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대책이 들어간다.

김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안팎에서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엔 ‘추석 연휴 기간 중 나 홀로 아동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긴 연휴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해 근심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에게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 홀로 아동

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임시 공휴일 기간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식지원 아동점점 등을 당부했다.

또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추진단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마련, 범부처 공동추진 전략,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검토한다. /뉴스

### 靑 6월 임명자 재산…김현철 54억·박수현 -6465만원

지난 6월 청와대에 임명된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었으며 제일 적은 사람은 박수현 대변인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와 부처 고위 공직자 114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알려진 공직자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임명된 인물들이다.

이날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재산이 54억36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24억8743만원)이었다.

뒤를 이어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19억3806만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15억6826만원), 김형연 법무비서관(13억1217만원), 김우호 인사비서관(12억5801만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12억5466만원),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13억4944만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12억6455만원),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11억7060만원), 정혜순 뉴미디어비서관(10억6913만원) 등이 1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1억 미만 재산이 신고된 사람은 김해에 기후환경비서관(8429만원)과 박수현 대변인(-6465만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채무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이 등록됐다. /뉴스

### 전병헌靑 정무수석, 민주당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협치의 방안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정 부분 화답하는 모양새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제는 개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본권형 개헌이라든지 개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 수석은 “국민의당의 제1관심은 개헌보다 선거구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많이 확인됐다”며 “선거구제 문제는 민주당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원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가 논의를 뒷받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뒷받침할 문제는 아니다.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수준의 이야기지 ‘약속’ 이런 수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그런 것을 약속할 입장도 아니고 논의에 앞장서서 나설 사안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

#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5년간 1조 7000억

### 김광수 의원 “징수금액 총 1199억 징수율 7% 불과… 건보료 상승 원인·대책마련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 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으로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또한,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 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2,32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00약국의 경우 환수결정 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 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

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 병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지방선거서 ‘현역 컷오프’ 적용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하위 20% 이내의 평가를 받은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점수의 10%를 깎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20%를 일괄 배제(컷오프)한 것과 비교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 이내인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불출마나 상황 출마자를 포함한 당 소속 공직자 전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하위 20% 의원을 공천에서 일괄 배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배제 방식이 탈당의 촉발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또 현역의원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교육

해복는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호주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